

[별지 제5호 서식]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 연구 과제 명	자산활용 노후소득보장방안 타당성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안나
부 서 /과 제 담 당 관	4급, 고득영	담당공무원	5급, 노정훈
연 구 기 간	2006.11.22 ~ 2007. 5.25 (6개월)		
활 용 구 분	1. 법·제도 개선() 2. 정책반영 3. 정책참조(○)		
연 구 목 적	<p>○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구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이 제도 시행초기 단계로서 미성숙한 상태이며 그 보장성 정도에 있어서도 불충분한 실정</p> <p>- 현세대 노인의 경우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p> <p>※ '05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소득보장 수혜자 비율은 3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13.5%, 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 등 공공부조 수혜비율 14.2%)</p> <p>○ 한편, 대표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 제도는 개별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생활양태는 기초수급자와 유사하나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p> <p>- 특히 재산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대부분이 낡고 오래되어 자산으로서의 실질적인 효용 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거주용으로 보유하고 있어 유동자산으로의 환금성도 극히 낮을 수 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 자산 기준을 완화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이러한 저소득 차상위계층 노인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급여를 제공하고 그 자산의 현재가치가 지급 급여액 총액과 동일해 지는 시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노인보유 주택 등의 유동화를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적보증 역모기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 제도가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 -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민간은행에서 매월 대출금 형태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제도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보유한 주택은 시장에서의 수용 가능성이 낮아 유효시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따라 공적보증 역모기지와는 별도로 저소득층 노인 대상 역모기지 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연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대상 계층 및 적용대상 규모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현황 분석 및 추계 - 소득계층별 자산보유 현황 및 유동화 가능 자산 현황 분석 -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소득보장 가능한 규모 추계 - 공적보증 역모기지 적용 대상 분석 ○ 도입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대상 역모기지 제도 외에 저소득층 대상 역모기지 제도 도입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 적정급여 수준 및 가입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급여 수준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 등 제도적 지원방안 ○ 자원조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여부 및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 <p>○ 관리운영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모기지 제도 관리체계 및 민간·정부간 역할 분담 방안 <p>○ 공공부조제도와와의 조화 및 확대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이 자산 초과시 기초수급자 선정으로의 연계 여부 - 향후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대상 공적부조 확대 시 적용대상 확대 병행 검토 <p>○ 외국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및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회적 역모기지 운영 사례 연구 및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활 용 목 적	<p>○ 기존에 실시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역모기지 사례들을 종합·비교분석함으로써, 정부 및 민간에서 도입하고 있는 역모기지제도들이 노후소득보장 지원방안으로서 갖는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저소득 노인 대상의 역모기지 도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망</p>
정책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07.4월)으로 저소득층 빈곤노인의 빈곤해소를 위한 현금보조에 우선과제로 시행됨에 따라 추후 보완적 제도로서의 별도 방안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경제부(주택금융공사 시행기관) 주관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 제도(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우선 동 제도의 시행추이를 지켜보면서, 저소득층 노인대상 별도의 자산활용 노후소득보장방안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키로 관계부처간 협의 ◦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활용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노인들의 빈곤해소(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제도의 시행경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이 보유한 자산(주택, 토지 등)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 추진 필요